미국 잠재 대선후보 경제정책 비교

김세중 선임연구원

요약

미 대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화당 예비후보들과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오바마 대통령은 고용확대 방안으로 단기적인 정부지출 확대를 제시하고 있으나 롬니 후보는 규제완화와 같은 간접적인 방안을 지지하고 있음. 양측 모두 세제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나 세제개혁으로 인한 효과는 소득계층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예상됨. 국가부채 감축과 관련하여 오비마 대통령은 장기적인 재정지출 삭감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롬니 후보는 재정지출 삭감에 반대하고 공화당의 균형법안을 제시하고 있음. 의료보험제도(Medicare, Medicaid) 및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기존 제도 유지를 제안한 반면 롬니 후보는 전면적인 개편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건강보험 개혁안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

2012년 11월 6일 치러질 예정인 미 대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화당 예비후보들과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 간의 경제정책 대결이 이슈로 부상하고 있음.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8%를 상회하고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미 대선의 이슈는 강력한 경제 대책으로 모아지고 있음.
- 공화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꼽히고 있는 미트 롬니(Mitt Romney) 전 메사추세스 주지사는 2011년 9월 자신의 경제정책을 담은 공약집을 발표하였고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도 2012년 1월 24일 신년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을 통해 자신의 경제정책을 재확인함.
- 본고에서는 공화당 미트 롬니 후보와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오바마 대통령은 단기적인 세제 혜택,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고용확대 방안을 제시한 반면 롬니 후보는 지출확대 보다 규제완화, 세율 인하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힘.

- 오바마 대통령 측은 일시적인 세제 혜택(tax break), 교사 · 경찰 · 소방관 고용을 통한 연방 지출 확대,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확대, 만성적 실업자에 대한 재교육 기회 제공 등을 통한 일자리 확대방안을 제시함.
- 반면 롬니 후보는 직접적인 지출 증가보다는 규제 완화, 영업세(business tax) 인하, 자유무역 확대, 국내 에너지 생산 활성화를 위한 허가절차 간소화 등 보다 간접적인 방법을 통한 고용확대 방안을 선호함.
- 롬니 후보는 또한 중국의 무역관행을 변경하도록 압박함으로써 중국 제품의 가격을 현실화하고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함.

■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후보는 모두 전반적인 세제 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나, 양 측의 세제 개혁안은 각기 다른 소득계층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분석됨.

- 오바마 대통령은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인 개인과 25만 달러 이상인 가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한편 부유층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이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세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 롬니 후보는 부동산세와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인 개인의 배당금, 이자 및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고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적용된 세금 감면혜택을 포함한 기타 세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함.
-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현행 35% 수준인 법인세의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롬니 후보 또한 법인세를 35%에서 25%로 인하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것(day one priority)이라고 밝힘.
- 세제센터(Tax Policy Center)는 소득수준 하위 40%의 국민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안에 따라 납세액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였고 소득수준 중간층 40%는 변동이 없으며 상위 20%의 경우는 롬니 후보의 안에 따라 납세액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함.
- 오바마 대통령의 안에 따르면 미국인의 1년 평균 납세액은 현재에 비해 1,373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롬니 후보의 안에 따르면 3,566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두 안 모두 국가 부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지는 불투명함.

■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장기적인 재정지출 삭감과 국가부채 감축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롬니 후보는 「균형법」(안) 입법을 제안하는 한편 구체적인 부채 삭감 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지출과 의료보험제도인 Medicare, Medicaid지출을 각각 6천억 달러, 3천억 달러 삭감하는 등 향후 10년간 1조 2천억 달러의 재정지출 삭감방안을 제안함.
- 롬니 후보는 공화당이 제시한 「균형법안(Cut, Cap, Balance Act)」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균형법안」은 정부지출을 GDP의 20%로 제한하고, 연방 공무원을 10% 감축하며, 균형재정 조항을 준수하는 등의 내용을 가지고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3조 달러의 국가부채 감축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1/3은 새로운 조세수입으로 충당하고 2/3는 지출 삭감으로 달성할 계획임.
- 롬니 후보는 명확한 국가부채 삭감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세제센터는 롬니 후보의 세율 인하가 국가부채를 연간 6천억 달러씩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하고 국가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부지출 삭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힘.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해 롬니 후보는 개혁안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으며, 각 주별로 선택권을 부여하고 의료비용 증가 억제를 위한 의료소송 남발 방지 방안 등을 제시함.

- 2010년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추진된 건강보험 개혁안은 현재 모든 개인에게 건강보험을 강제한다는 규정이 헌법에 합치하는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만약 대법원이 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 법안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롬니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연방법 대신 각 주별로 의무 건강보험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은 의료과실에 대한 소송과 같이 의료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에 대한 제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반면 롬니 후보는 의료소송 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재정적자 문제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Medicare, Medicaid) 및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비용 감축을 위한 소폭의 조정을 제안하는 반면 롬니 후보는 전면적인 개편을 주장함.

- 오바마 대통령은 노인 의료보험제도인 Medicare제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서 디지털 의료기록 사용 권장, 부유한 고령층의 부담 확대, 의료비용과 관련한 정부권한 확대 등 의료비용 감축방안을 제시함.

- 반면, 롬니 후보는 기존 수혜자들에게만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고 궁극적으로는 Medicare 제도가 노인층에게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액보조를 제공하는 보험료 보조 정책(premium support plan)으로 전환되기를 희망함.
- 오바마 대통령은 Medicare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의료보험제도인 Medicaid도 현재와 같은 형태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롬니 후보는 Medicaid를 보조금제도(Block Grant Program)로 변경할 경우 연간 2천억 달러가 절약될 것이라고 주장함.
-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개혁에 대해서 어떠한 안도 내놓지 않고 있으나 롬니 후보는 퇴직연령을 높이고 부유층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등의 대책을 제안했으며, 사회보장과 관련한 추가적인 증세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함. KiRi